

# 尹,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... 10개국과 양자회담 추진

윤 대통령,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유럽과 협력·공조강화 등 과제 한일·한미일 정상회담은 '미정' 북핵 문제 등 동맹국 지지 이끌 듯



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(현지시간)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·나토) 정상회의를 통해 첫 다자외교무대에 나선다.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. /대통령실

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(현지시간)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·나토) 정상회의를 통해 첫 다자외교무대에 나선다.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 공식 초청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인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.

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·호주·뉴질랜드까지 아시아·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에 대한 초청에 따른 것이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불확실한 국제안보 정세, 인도-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에 비춰 스웨덴·핀란드·우크라이나·조지아·EU(유럽연합)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.

나토정상회의에서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▲유럽 우방국들과의 협력·공조 강화 ▲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확보 ▲경제안보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▲한일관계 개선 및 대중·대러시아 관계 악화 최소화 등이 우선적 과제로 거론된다.

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'원전 수출 강국' 달성을 위한 원전 세일즈를 비롯해 반도체, 신재생에너지,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, 2030 부산 엑스포 유치,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.

대통령실 관계자는 "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한 10개 정도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"며 "유럽의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함께 만나 유럽과 양자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, 체코, 덴마크, 네덜란드 이외에도 유럽의 중요

한 국가들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해 들어오고 있어 빠빠하고 조밀하게 사출에 걸쳐 집어넣을 생각"이라고 설명했다.

다만, 이 관계자는 "한일,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"이라며 "아태 파트너국 4개 나라끼리는 정식회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략한 회동 정도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초대받은 국가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"라고 밝혔다.

이어 "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직 공식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, 개최가

능성은 열려있다"며 "한일정상회담은 일본에서 앞둔 선거 문제도 있어 민감한 시점이다. 중요한 문제를 다른 계기에 만난 회담에서 한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양국 간에 있는 건 사실"이라고 덧붙였다.

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"우리는 어디까지나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았다"며 "포괄안보의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심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반중, 반러 정책으로의 어떤 대전환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"고 선을 그었다.

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"500만불은 이미 집행이 됐고, 추가로 500만불을 또 지원하기로 해 총 1억불이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공여될 예정"이라며 "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"이라고 강조했다.

또,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과 함께 원전 세일즈 등 경제안

보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.

대통령실 관계자는 "나토정상회담 세션 중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간 조인트 세션이 있다"며 "윤 대통령이 그 계기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로 우리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다.

관계자는 "경제안보 관련된 사안은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, 국제 글로벌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모여있다"며 "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"고 말했다.

또 다른 관계자는 "원자력의 경우 경제협력 패키지가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. 원자력 수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나라가 체코, 폴란드, 네덜란드"라며 "대규모의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과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가 된다"고 밝혔다.

그러면서 "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, 전기차, 차세대 배터리,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 분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된다"며 "녹색경제, 신재생·수소에너지 등을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덴마크로 회담 준비가 되고 있다"고 덧붙였다.

/박정익 기자 pathfinder@metroseoul.co.kr

## 맞 오른 與 혁신위... '계파 갈등' 신호탄?

최재형 위원장 등 총 15명 구성 친윤 계열서 이준석 대표 '견제' 정당 개혁 과정에서 계파갈등 소지



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. /뉴스1

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. 최재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혁신위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을 맡게 된다. 특히 2년 뒤 22대 총선과 관련, 혁신위가 계파 갈등 뇌관인 당 조직·공천 개혁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.

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으로 혁신위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3명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. 인선안은 최고위원 7명이 각 1명씩, 최 위원장 직권으로 7명(부위원장 포함)을 추천해 구성한 것이었다.

최고위원 추천 혁신위원은 한무경·김미애·서정숙 의원,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센터장, 이건규 (K)JCT 관리이사, 천하람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,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 등 7명이다.

최 위원장 추천은 조해진·노홍호 의원, 이육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, 정희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(경제정의실천연합정치개혁위원회위원), 채명성 변호사(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), 구혁모 경기화성시의원(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), 광항기 서울시의원 당선자 등 7명이다.

혁신위원 명단만 보면 당 지도부 추천 인사도 포함돼 향후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.

이 대표와 다투는 최고위원의 추천 인사도 포함됐기 때문이다. 혁신위 출범을 두고 이 대표 사조직 논란도 있었던 만큼, 정당 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계파간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.

특히 이 대표는 6·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친윤(親 윤석열)계로부터 견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.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'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' 징계 심사에 착수한 것도 견제 차원으로 해석된다.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상태다.

김철근 정무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회유 시도와 함께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까지 작성한 의혹이 있다. 당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'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'으로 보고 징계를 하기로 한 것이다.

이 대표는 의혹으로 윤리위가 징계 심사를 시작한 만큼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. 친윤계 중심으로 이 대

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여전하다. 앞서 친윤계 좌장 격인 정진석 의원과 한 차례 다투고,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불편한 감정을 이어가고 있다.

이 대표는 친윤계로부터 견제받는 가운데 혁신위 출범과 '자기 정치'를 꺼내든 것이다. 이에 혁신위가 이 대표가 예고한 공천 개혁 과제도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. 최재형 위원장은 앞서 "시스템 안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"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바 있다.

혁신위 출범에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"앞으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"고 당부했다.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 자체가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,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.

/최영훈 기자 choiyoungkr@

## 여야 막론한 성추문... 당 권력관계 파동

국힘 윤리위, 이준석 성상납 의혹 내달 7일 소명 듣고 징계수위 결정 거취따라 혁신위 운명 달리할 듯

민주당, 최강욱 '당원권 정지' 처분 당내 계파갈등 도화선 될 가능성

직권조사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지난 21일 '당원권 정지 6개월'이란 중징계를 내렸다.

최 의원은 재심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.

더욱이, 지난 6·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후, 얼마 지나지 않고 일어난 성추문 사건이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줬다.

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와 반(反)이재명계의 대립과 당내 86그룹(80년대 학번·60년대 생)과 97그룹(90년대 학번, 70년대 생) 간 대립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중징계가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

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재심 청구를 시사하자 사회관계장서서비스 사에서 "한 없이 부끄럽다"며 강하게 질타했고 최 의원이 만든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'처럼회' 소속 김남국 의원은 "팬덤에 취해 막춤을 추는 건 박 전 위원장"이라며 비판했다.

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인지한 듯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"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"며 "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한다"고 말했다.

/박태홍 기자 pth7285@

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고 있어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.

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(윤리위)는 지난 22일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.

회의 결과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.

또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이 대표 성상납 증거 인멸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.

현직 대표를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'경고'만 받아도 앞으로의 정치 경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.

당권을 둘러싸고 이 대표와 반대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징계 논의까지 겹치자 당내 내용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. 이 대표가 당내 혁신을 위해 조직한 혁신위원회도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.

민주당 윤리심판원도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